



박래영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춘 인구정책 절실

인구증가율의 둔화

최근, 우리 나라의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적게 가지거나 아예 가지지 않으려고 하여 출산율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고 한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981년에 임신 가능한 연령의 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가 2.7명이던 것이 1991년에는 1.7명으로, 그리고 2001년에는 1.3명으로 떨어지고 있다. 기혼 부인 1명당의 평균 출생아 수도 1991년 2.2명에서 최근에는 1.7명 이하로 낮아진 것이다.

이처럼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대신에 인구의 노령화로 인하여 사망률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1980년대 중반이후 1% 수준을 유지해오던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떨어져서 2002년에는 0.6%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추세로 가면 당초의 예상보다는 훨씬 빠른 2020년에서 2025년 사이에 우리 나라 인구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안정인구(stable population)에 도달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인구가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고 통계청은 추계하고 있다.

저출산과 경제

이러한 발표가 있는 후 일부에서는 성급하게 출

산을 장려하여 인구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출산의 급격한 감소가 그대로 방치되면 인구구조 면에서 젊은이의 비중이 적어지고 노령층의 비중이 커져서 한편으로는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이의 노인부양부담이 늘어날 것이므로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물론 이들의 주장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다.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면 산업생산에 대한 투자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가능성도 없지 아니며 전반적인 소비수준이 저하될 여지도 없지 않다. 그 결과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미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 또한 그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출산율을 다소 높인다고 해서 이러한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큰 착각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미 좁은 국토에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서 일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중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의 국토면

적을 고려할 때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적정인구는 적으면 300만 명, 많아야 500만 명을 넘지 않는다고 하니 이미 우리 나라는 적정인구의 10배에 이르는 초과밀 상태인 셈이다.

저출산과 노동력

출산율이 낮아지면 노동력이 부족해 질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 수준으로 실업자의 수가 70만 명을 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12%를 넘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공식적인 실업 이외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은 실업자가 더 많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등으로 조기퇴직한 중장년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일자리를 구하다가 지쳐서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조기은퇴하기도 하였다. 일자리가 있으면 취업하고자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중고령자 등이 수없이 많다.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에도 미달되고 있어서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장애인과 중고령자도 비슷하다. 이들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미래에도 노동력의 부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물론 노동력이 부족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들도 적지 아니하다. 임금이 낮고 근로조건이 나쁜 이른바 3D부문 등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이미 30만 명을 넘어 선 지경이다. 이 부문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임금과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노동시장에서 이러한 '과잉 속의 부족'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

이다.

출산저하를 막는다고 해서 당장 노동력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며 15년이나 20년이 지나야 노동력이 다소 증가하게 된다. 설사 노동력이 증가한다고 해서 이들이 3D부문에 취업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시기에는 경제상태가 지금과는 너무나 달라 질 것이어서 오히려 실업만 증대시킬 뿐 경제발전에는 별로 도움이 안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지식기반경제의 인구정책

이미 세계는 국가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벗어나서 국경 없는 무제한 경쟁의 지식기반사회로 바뀌고 있다. 상품과 자본이 국경 없이 오가는 가운데 기업들은 국가에 관계없이 경쟁력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자리잡게 되며 국내수요보다는 국제수요에 바탕을 두어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다. 국가의 경제성장과 경제활력은 싼 임금의 노동력보다는 IT, BT, NT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합성지식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

다수의 노동력이 경제를 이끌어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소수의 창의적인 지식노동자가 이끄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다수의 국민을 부양하는 시대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최근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실업이 급증할 뿐 아니라 높아진 실업은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는 해가 지날수록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더 이상 출산을 억제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출산을 장려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앞으로의 인구정책은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PPFK}